

‘스마트워치’로 여성범죄 피해자 보호하자

전문가, 착용 ‘의무화’ 법안 필요 제시
사용 거부시 대체 안전장치 대안 없어

‘여성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스마트워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는 2019년 1만 5289건, 2020년 1만 5383건, 2021년 1만 7134건이며 스토킹 범죄 신고도 2019년 1377건, 2020년 1108건, 2021년 3740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여성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주거지 순찰 등 각종 제도를 안내하고, 위치 확인과 즉각적인 112 신고가 가능한 ‘스

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스마트워치 사용 여부는 강제적으로 적용 할 수 없어 거부 시 안전 장치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범죄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용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스마트워치가 신변 보호용임을 타인이 인지할 수 있어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워치’를 꼽고 있다.

지난 1월 안성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5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여성은 스마트워치 지급을 거

부한 것으로 알려져 초동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여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경찰의 대처가 중요하다”며 “때문에 스마트워치 착용을 거부하면 적극적인 신변보호가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 전문가는 스마트워치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는 여성범죄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스마트워치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양주 실종 장애인 끝내 차가운 주검으로

최초 동선 파악 늦어져 수색 장기화
사건 발생 17일 만에 노고산서 발견
학대 등 혐의로 B복지원 조사 계획

양주시 백석읍에서 실종된 지적장애인 A씨가 사건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31일 노고산 자락에서 안타까운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망한 지적장애인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1시경 백석읍 B 복지원 뒤편 야산에서 12명의 입소자와 산책 중 이탈해 실종됐다.

119에 신고가 접수되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신장 170cm, 56kg에 남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48세 남성 A씨가 실종됐다는 긴급문자를 전파했다.

이후 양주시는 의용소방대와 공동으로 수색견 4마리와 직원 70명을 현장에 투입했고 18일부터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장병들이 백석읍 노야산을 중심으로 실종자를 수색했지만 동선을 찾는데 실패했다.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되자 양주시는 23일 긴

급 실종자 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달 24일부터 참여 대상을 대폭 늘려 실종자를 수색했다.

A씨는 실종 수사를 대대적으로 재편해 투입한 수색견 6마리에 의해 지난달 31일 오후 2시경 노고산 자락 좌측정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실종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 B 복지원은 지난 2006년 노안재가 복지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로 인가돼 운영 중이다.

현재 실종자의 시신은 발견과 동시에 양주 장례식장에 안치했으며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B 복지원 측과 장례와 관련된 면담을 진행 중이다.

B복지원은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방임 혐의로 경기북부 장애인 권익기관에서 시설조사를 비롯한 경찰조사가 병행될 전망이다. 2일 부검 예정이다.

한편 실종자 A씨가 거주한 중증장애인 복지법인 시설책임자 C원장은 실종자 수색 기간 동안 외부에 장기간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 입소자 관리 문제에 대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호민 기자

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비공개 정당”

2심서 양국 이해관계 충돌 초래 가능
송기호 변호사, 소극적인 사법부 비판

대법원이 2015년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진행한 협상의 결과물”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양국이 2014년부터 2015



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법원 법정을 나오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까지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현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 보고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서도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진석 기자

코로나 3년 간 ‘여성 10명 중 4명’ 일자리 떠났다

여가부, 2022년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자녀돌봄 상황 기혼여성 58.4% 차지
김현숙 장관 “조기 재취업 적극 지원”

코로나19 사태 3년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성가족부는 ‘경제활동동기’인 만 25~54세 여성 8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 번이라도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은 42.6%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7.6% 증가한 수치다.

경력단절은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중 유자녀 기혼여성은 58.4%인 반면 무자녀 기혼여성은 25.6%에 그쳤다.

때문에 이들이 일터를 떠난 직접적인 요인으로 ‘긴급한 자녀돌봄 상황에서 대응방안의 부재’가 49.8%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다시 직업을 얻

는 시간은 8.9년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1년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력단절 후 새로운 직업을 찾아도 전 직장에 비해 임금과 고용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이전 1~4인 사업체 종사 비율은 20.9%였으나 경력단절 이후 45.7%로 크게 증가했다. 5인 이상 사업체 종사 비중은 모두 감소했다.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의 현황을 보면 사무직·전문직, 상용직, 전일제 일자리는 줄었고, 판매·서비스직, 임시직·자영업자, 시간제 일자리는 늘었다.

아울러 주 평균 근로시간도 4.3시간 감소했으며, 임금 수준은 경력단절 이전의 84.5% 수준에 머물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조기 재진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이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기술 및 고부가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위해 민간기업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경찰, 전세사기 ‘빌라의 신’ 일당 공범 추가 구속

주택 3400여 채를 소유한 속칭 ‘빌라의 신’ 일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 채를 사들이고 피해자 170여 명으로부터 280여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기소 돼 징역 8년 등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의 공범이며, 특히 일당의 주범인 40대 B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빌라의 신과 관련 현재까지 24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 명, 피해 금액은 800억여 원으로,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진실이 통하는 대한민국! 경기신문이 만들어 갑니다

